

‘몰카 피해’ 남성 1년새 2배 증가... “협박당해” 신고 급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6952명...남성 1843명 피해자 42.3%가 10~20대...51.7% 가해자 몰라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695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1년 사이에 피해자 수가 2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6952명, 지원한 서비스는 18만8083건이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피해자 중 2020년 대비 여성은 4047명에서 5109명으로, 남성은 926명에서 1843명으로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피해자 증가와 관련해 “불법 촬영 협박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0대 21.3%, 20대 21.0% 등 10~20대가 42.3%를 차지했다. 이 밖에 30대 6.8%, 40대 2.5%, 50대 이상 2.0%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6.4%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1.7%인 3595명이다. 28.2%는 일시적 관계, 7.8%는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접수된 피해 1만353건 중 유포 불안이 25.7%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21.5%, 유포 20.3%, 유포 협박 18.7%, 사이버 괴롭힘 4.1%, 편집·합성 1.7% 순이다.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은 16만9820건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 3만1980건(18.8%), 검색엔진 3만372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 성적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적취물 등 4만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1년 전체 삭제지원 16만9820건 중 15.0%인 2만5432건이다. 삭제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이름이 1만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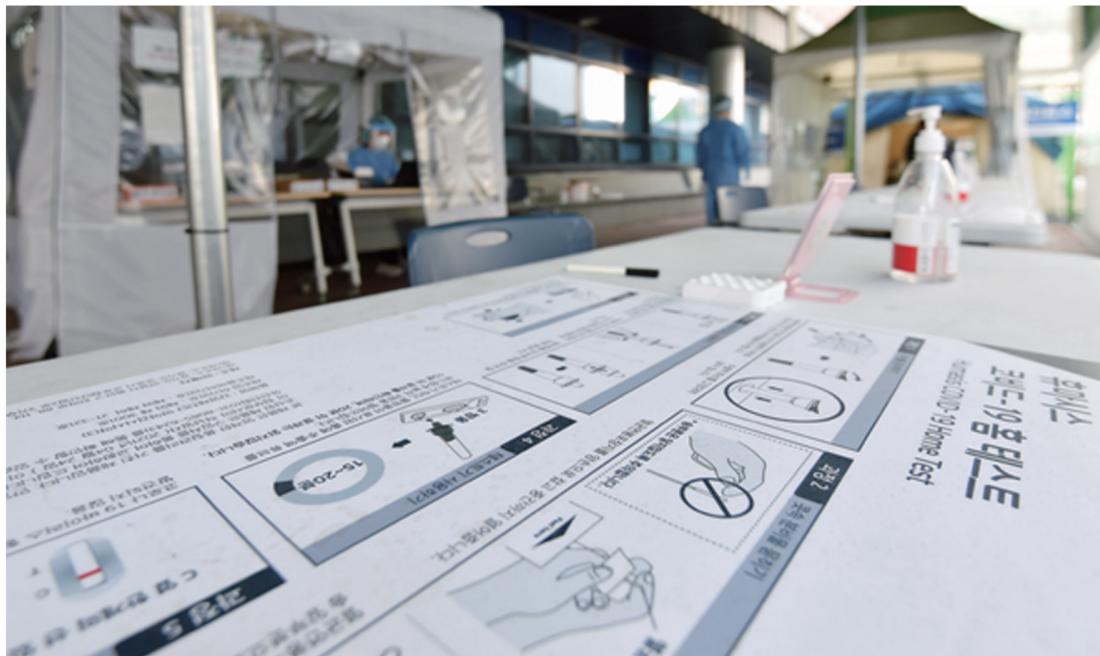
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을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

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대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라며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적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한산한 신속항원검사소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1328명으로 집계된 4일 오전 대구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거리두기’ 가능성... “학교방역 어떻게”

교육부 “금주부터 질병청과 실무협의 착수”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행 학교방역지침을 유지하고 새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새 학교방역지침은 학교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안내하고 18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국장은 “이번주 질병관리청과 방역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큰 변화가 있을 때와 같이 조만간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청장과 화상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정부는 유행 수준이 급증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 도구를 활용한 학생 선제검사 권고 횟수가 기존의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드는 등 학교 방역체계의 변화가 예상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 우려가 높은 기숙학교에 한해서는 선제검사 횟수를 주 2회로 유지하

기로 한 상태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감염 규모도 오미كرون 변이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줄어드는 양상이다.

개학 첫 주인 지난 1~7일 27만1648명에서 8~14일 40만8928명까지 치솟았다가 15~21일 40만8622명, 22~28일 35만275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328개교 중 92.0%인 1만8692개교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며, 부분 등교까지 포함하면 2만224개교로 99.5%다. 전체 학생 중 등교 수업 비율은 86% 수준이다.

신광수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장은 “3월 3주차 이후 감염 감소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집계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하락세라는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일선 학교에서 시작하는 중간고사 등 지필시험에 대해서는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인정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이전에 해당 학생이 봤던 시험 점수 등을 활용해 시험 점수를 인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학교 시험 같은 경우 3일에서 5일간 시험을 치러야 하고, 대규모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하며, 다른 비 확진 학생들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별도 방역 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 한은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슬비기자

“왜 영업 끝내?” 식당 종업원에 행패 부린 30대 입건

밀친 혐의(폭행)입건 조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식당 영업을 마친다는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식당에서 종업원을

밀친 혐의(폭행)로 A(3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22)씨를 한 차례 밀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신 A씨는 ‘방역 지침에 따

라 식당 영업을 마친다는 B씨와 승강기를 빌리다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